+

以人



천 세 진 문화비평가·시인

도서관에 자주 가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는 다. 필요한 책만 챙겨 곧바로 빠져나온다. 독 하고 검은 공기가 가득한 공간으로 느껴져서 다. 도서관에 오래 머물려면 슬픔을 감당해 야 한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만, 질 낮은 슬픔이어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다.

도서관은 변했다. 현재 지내고 있는 전주 는 아름다운 도서관들을 가졌다. 도서관마다 색다른 디자인과 풍광으로 책을 읽는 공간만 이 아니라 놀이터와 쉼터 역할도 하고 있다.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던 예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그런 모습이 기껍게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아름답기만 하면, 편하고 즐거운 놀이터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걸까? 도서관은 결국 책이 사는 집이다. 집은 집다워야 한다. 도서관이 도서관답다면 책으로 결정되는 정체성을 지 니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런 정체성이 흐 려지면 대형 북카페와 무엇이 다를까.

무작정 도서관을 욕할 수는 없다. 시민들 의 요구와 시대 조류를 피해 갈 수는 없다. 문 제는 이 시대의 조류가 질이 아니라 양에 있 다는 점이다. 얼마 전 만난 분에게서 책의 양 과 질에 대한 소회를 들었다. 수만 권의 책을 읽었다는 이가 쓴 책을 읽었는데, 수만 권의

도서관이 일으키는 슬픔

용이었다는 것이다.

수만 권의 책을 읽는 게 가능할까? 문고판 이나 만화책, 듬성듬성 편집한 자기계발서를 읽는 게 아니라면 그건 불가능하다. 읽는 것 이 아니고, 말 그대로 보는 것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 빠르게 종이를 넘기며 눈으로 훑 는 것이라면 하루에 열 권이 아니라 수십 권 도볼수있다.

수만 권의 책을 읽었다는 이에게 물어보고 싶다.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 근대』, 박상륭의 『죽음의 한 연구』, 클라우디오 마그리스의 『다뉴브』, 비톨트 곰브로비치의 『페르디두 르케』 같은 책을 하루에 다 읽었는지 말이다. 들도 읽었을 것이다.

책의 세계는 양의 세계가 아니라 질의 세 계다. 수만 권의 책을 읽었다는 공언이 축적 을 조금도 보장하지 않는 세계다. 제대로 된 책을 읽는다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 5천 권의 책을 넘기기 어렵다. 수만 권의 책을 읽었다 면 이미 인류 지성계에 이름을 휘날리고 있 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이들의 이름을 들어 보지 못했다. 다른 일들은 양적 노력이 빛을 발한다. 책의 세계도 그런 법칙이 통하지 않 는 것은 아니다. 단, 양이 절대적인 변수로 작 동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는데 바로 책의 세

도서관은 시대와 문화권의 초상이다. 그 초상 속으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형편없 는 책들이 가치 있는 책들과 비슷한 무게와 가격으로 쏟아져 들어간다. 명품과 천품이

책을 읽은 내공을 조금도 확인할 수 없는 내 쪽같은 기준으로 꽂혀있는 신간 코너를 보면 슬퍼진다. 책에 대한 식견이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어느 영역이나 장르든 명품의 세계가 존재 한다. 다른 세계의 명품들은 하나의 가격이 일반품들의 백배, 천배가된다. 명품은 가격 의 문제가 아니다. 가방 천 개를 모아놓는다 고 명품 가방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기이하 게도 책의 세계에서는 명품과 일반품이 똑같 은 취급을 받는다. 그런 기이한 풍경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책들의 집인 도서관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슬프다.

거의 모든 세계에서 돈만 있으면 명품을 얻을 수 있다. 수천억쯤 가지고 있다면 명화 도 얻을 수 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책은 수만 권을 읽었다면 당연히 명작들인 그 책 명품과 천품(賤品)의 가격 차이가 나지 않 는다. 명품의 가격이 그토록 싸니 천 권쯤 사서 그것만 머릿속에 담아도 될 텐데, 담는 이가 많지 않다. 그보다 기이하고 슬픈 광경 이 없다.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고 들이대는 증거들 을 보면 하나같이 양적인 것들이다. 그렇게 대단하다면, 명성에 필적하는 높은 수준의 지적 소산을 인정받고 있는가? 전 세계인들 이 손에 꼽는 작품이 있는가? 세계 유수의 기 관들에서 추천하는 명저에 한국 작품은 없

작가들의 책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도 서관에 비치하는 나라다. 신작 영화를 하나 사서 전국 도서관에서 상영하면 저작권 문제 로 난리가 날 것이다. 문제는커녕 책의 저작 권을 인정하지 않고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을 시혜처럼 생각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슬프다.

社 說

전남권 의대 대학병원 동·서부 신설이 합당할 것

전남권 국립의과대학은 '의대 선정 후 동·서 부 2개 대학병원 신설' 또는 '의대·대학병원 동 일 지역 설립' 등 2개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될 전 망이다. 도민 여론조사를 거쳐 확정될 것인데, 전체 의료 균형을 위한 측면에서라도 1안이 더 적합해 보인다. 동부권의 반발 속에 전남도는 의 과대학 용역에 한창 속도를 내고 있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공정한 룰'을 통해 의대 설립 대학을 결정하고 정부에 추천하기 위한 과정에서 진통 을 겪고 있으나 대학병원을 양 지역에 둔다면 단 일 의대 추진에 따른 부담을 다소 덜어줄 수도 있다.

사실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이야 동·서부 가 별반 다르지 않기에 목포대와 순천대 모두 물러설 수 없다. 동부권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전남 생산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현장이 많아 외상센터 등 여러 분야의 의료 체계가 시 급하다. 서남권은 섬이 산재하고 이미 초고령 화 사회로 진입했다. 조선업 관련 응급의료 수 요 역시 무척 높지만 시스템은 부재하고 필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의대 설립 방식 또한 초미의 관심사인 것이다. 1안 사업비는 1천병상 기준 7천억원, 2안은 800병상 기준 5천600억원 으로 추산되고 있다. 건립 비용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역의 현실에 맞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본다. 일단 용역기관은 도민 2 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이번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론 9월 말까지 평가 기준 및 방법 설계를 진행하며, 10월 말까지 정부 추 천 대학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순천대에서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관련 설명회가 열리는 것도 일단 고무적으로 받아들 여진다. 추진 과정 정보 공유와 지속적 의견 수 렴 필요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요구에 따른 차원 이며, 공모 참여로 확대 해석하지 않기를 바란 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일각에서 입장 변화 아니 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남 도민 의사를 반 영하는 숙원 사업이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선의 의 경쟁을 벌여야 하고 투명한 평가가 선결돼야 하는 것이다. 국립의과대학 설립 방식이 제시됐 다. 동·서부의 극한 대치를 푸는 계기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코로나 넘어선 침체…영세 자영업자의 슬픈 현실

자영업자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불황 의 장기화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은지 오래다. 한 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 3년 부채 규모는 광주와 전남이 각각 23조원과 2 4조원으로 2019년 대비 각각 65.4%, 58.3% 뛰었 다. 1인당 평균으론 지난해 기준 2억9천만원과 2 억1천만원에 달했다.

2023년 광주와 전남의 자영업자는 2019년 대비 각각 2.1%, 10.0% 증가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특히 상승했다. 두 지역 모두 임금근로자 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빚이 눈덩이로 불어나면 서 폐업도 빈번하다. 지난해 광주지역 공제금 수 령 건수는 2019년 대비 60.5% 증가, 광역시 평균 (45.7%)을 상회했다. 같은 기간 전남은 무려 115 .4%에 이른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의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경쟁 심화와 수익 악화, 부채 증가 등으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코로나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엔데믹을 전혀 실감할 수 없다. 단군 이래 최악의 사태라

는 시절을 넘겼지만 요즘처럼 어려운 때는 없었 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대다수가 일자리를 구하 지 못해 마지막 선택으로 개업에 나섰으나 절망 하고 있다. 장사는 이전만 못한데 인건비가 올라 부담이 커졌다. 고용원 없는 나홀로 영업이 많 고, 고용원이 있더라도 소규모인 사례가 과반 이상으로 뚜렷하게 느는 추세다. 직장인들의 저 녁 회식마저 줄어들면서 야간 영업 수익은 급격 히 감소하고 있다.

실패는 할 수 있지가 아니라 이젠 실패하면 끝 이다. 내수시장이 회복될 기미조차 없는 수상한 시절이다. 그런데도 울며 겨자먹기로 잇따라 가 게가 생겨나고, 또 가게가 망하고, 다른 가게가 또 들어온다. 광주·전남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 세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영업자 의 폐업은 편의시설 부족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역 경제에도 부담이다. 궁극적으로 나라 전체에도 피해가 미친다. 고물 가, 고금리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자영업 생태계 회생을 위한 대책이 절박하다.

<び 자치칼럼



김 병 도 前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중앙권력이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다. 중앙으로 집중된 권력은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더 나은 삶을 위 해 헌법을 바꿔야 한다. 스위스를 배우자. 국 민 개개인이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은 시대정 신에 부합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제 자치분권은 더 실용적이고 효 율적인 민주정치를 구현시켜 줄 것이다.

국민의 삶은 이론이 아닌 일상에 있다. 상 황에 맞는 정치 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제정된 제6공화국이 현재 진행 중이다. 당시 국민적 요구는 대통 령 직선제, 지방자치 실현이었다. 이후 37년 이 지났다.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와 시대 적 요구를 반영한 헌법 개정이 강력히 필요 하다.

개헌의 필요성은 다양하다. 먼저, 대통령 중심제다.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 이런 구조는 정치적 불안정과 권력 남 용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 회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대통령제를 내각제 로 전환하는 등의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 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불어 대통령 중임제 도입 논의도 필요하다. 현재 5년 단임제는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어 렵고, 임기 후반부에는 국정 운영 동력이 약 화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4년 중 임제 도입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과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 기본권이다. 정보화 사회 에서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권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 요가 있다. 더불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 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환경권을 보다 명확하 게 규정하고, 국가의 환경 보호 의무를 강화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세 번째는 선거 제도다. 선거 제도와 정치 구조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선 거 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 국민 의 의사를 더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국회의원 선거 에서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거나, 더 폭넓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소수정당이나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국회에 더 많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선거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 다.

네 번째는 평화 통일 정책이다. 한반도 평 화 정착을 위한 법적 기초를 강화해 남북한 간의 협력과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평화적 통일 방안에 더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북 관계의 변화 를 반영해 보다 구체적인 평화와 통일 정책 을 헌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섯 째는 시대적 요구다. 기존 헌법이 반 영하지 못하는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와 시 대적 요구를 신속히 충분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성평등, 소수자 권리, 젠더 문제, 가족의 다양성 등의 가치가 헌법에보 다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

여섯 째는 자치분권이다. 현행 헌법은 지 방자치에 대한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 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권한 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 성과 주민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더 자율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개헌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에서는 논의 가 전무하다. 현 대한민국 국회 행태를 보면 법률 제·개정에 의한 자치분권 구현은 불가 능에 가깝다. 혹 정부와 여야는 현행 헌법이 더 낫다고 여기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조속 히 개헌에 착수하길 바란다.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고, 지방정 부로 명칭과 기능을 전환하고, 주민자치권 신설, 과세자주권 강화 등을 담은 개헌을 추 진해야 한다. 국가적 재앙으로 불리는 지역 인구감소,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은 헌법 개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과거의 문법으 로 미래의 문을 열수 없다. 지속 가능한 미래 를 열어가기 위해 조속히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吡醇

초이스안경점

심여혜

파스텔 엷게 편 듯 아스팔트 뿌에지다 보고 싶은 형상들이 미간에 들인 주름 손 그늘 닿은 교차로 회색 어닝 따라선 곳 차가운 시간들이 두껍게 걸쳐진 테 훌훌 떠난 계절 앞에 원근법 생생하다 다초점 세상 속으로 빛들이 색을 입는

(시조집 '구름파이', 책만드는집, 2024)



[시의 눈]

바야흐로 생은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젊었을 적신던 밤색 구두를 신장 선반에 얹은지 꽤 됐습니다. 나이 드니 운 동화가 편하더군요. 팽팽한 구두엔 곧 먼지가 내려앉고 삭게 돼 결국 버려지겠지요. 어느날부터 까맣게 보여야 할 아스팔트가 회색으로 보입니다. 주변의 노인 교통사고를 목격하며, 승용차도 몰지 않아야겠다 맘먹습니다. 얼마 전 면허증을 반납할까하고 경찰서 민원실에 갔다가 복잡하단 핑계로 그냥 왔네요. 요즘 아내는 나더러 책 앞에 잔 뜩 미간을 좁힌다는 지적을 하곤 합니다. 그래, 난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어 보이지요. 오늘은 동네 사거리 안경점 어닝 안을 기웃거리다 내 손목을 끌어당깁니다. 그러곤 쌈박질하듯한 칼주름 미간도 가리기 좋다며, 두꺼운 초이 스검은 테의 다초점 안경을 권합니다. 인생의 봄과 여름을 보낸 오후, 단풍 든 나무의 미세한 떨림을 가까이 보려면 그게 좋을 듯합니다. 네일아트를 방금 받고 온 듯한 반짝거리는 은행잎 손톱의 아가씨가 다가옵니다. 그녀가 진열 장에서 꺼낸 안경을 받아 끼어 봅니다. 하, 원근법을 학습한 모범 수채화처럼 생생하군요. 세상 속 빛들은 형형색색 몸바꿈을 시작합니다. 눈가린 회색빛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안경 밖으로 도망한 빛을 더 멀리 쫓아냅니다. 이제 울긋불긋 단풍의 인생을 맞는 가을이니까요. 심여혜 시인은 부산에서 나, 2021년 '한국동서문학'으로 등단해 '이화 시조' 동인으로 활동합니다. 그는 소외된 존재들의 다양한 서사와 그에 드리워진 상처를 끌어내 따뜻한 정서의 부 조를 새기는 시인입니다. 〈노창수・시인〉

🭊 독자투고



'신독(愼獨)'은 '남이 보 지 않는 곳에 혼자 있을 때 도도리에어긋나지않도록 조심해 말과 행동을 삼간 다'는 의미로 대학, 중용 등 의고전에 나오는 말이다.

필자를 비롯한 모든 경찰관이 시민의 신뢰 를 받기 위해 '신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는 사람이 없어도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지 키고, 수처작주(隨處作主)의 마음으로 맡은 자리에서 보람을 느끼며 묵묵히 땀을 흘려야 할 것이다.

요즘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대부분의 동 료 경찰관들은 청렴하고 소박한 삶을 사는

신뢰받는 경찰을 위한 신독(愼獨)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업무에 있어서도 시 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과 이를 공공연히 실천 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

전남경찰은 '도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 지키기'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하루하루 서 로를 독려하며 시민의 신뢰를 점증적으로 회 복하고 있다.

영국 경찰은 '보비(Bobby)'라 불리며 친근 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인정받았지만 그것보 다 '보비'가 되기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 을 더 높이 사고 배워야 한다.

경찰의 노력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도움도

중요하다. 술에 취해 행인이나 경찰에게 욕 을 하거나 폭행을 일삼으며 질 높은 경찰 서 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어폐다. 정당한 공무 집행을 지지해주고 보는 사람이 없어도 기초 질서·교통법규를 지키는 등 성숙한 시민의 식을 보여줘야 한다.

경찰이 피해자나 가해자를 대할 때, 반대 로 시민이 경찰을 바라볼 때 '그가 내 가족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에게 부여된 '신 독'을 지킨다면 경찰은 최상의 치안 서비스 를 제공하고, 시민은 무한한 신뢰를 보낼 것 이다. (박준일 · 여수경찰서 화정파출소장)

+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광고문의 650-2099 650-2060 광고국 650-2016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마케팅본부 정치부 650-2030 사 진 650-2080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 설 경영지원국 650-2011 650-2006 사회부 650-2040 T V 본 사 업 본 부 650-2009 650-2007

국 650-2020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무 786-9488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 (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